

# CEO Information

2013. 1. 23. (제881호)

##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목차

I. 주요국 신정부의 출범

II. 주요국의 5大 경제정책 방향

III. 시사점

작성 : 정영식 수석연구원(3780-8097)  
ysik.jeong@samsung.com

박현수, 이종규, 김동구 수석연구원,  
권혁재, 최병삼, 이승환 수석연구원,  
정대선 선임, 정호성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 《 요약 》

### 2013년 주요국 신정부가 동시에 출범

2013년에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신정부가 동시에 출범한다. 프랑스 신정부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하였고,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2013년 2월과 9월에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세계 주요국은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와 저성장 및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정건전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구축으로 요약되는 3가지 큰 경제정책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국의 5大 경제정책 방향

주요국 신정부의 3가지 큰 경제정책 흐름에서 핵심적인 5大 경제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① 속도조절에 나선 재정건전화,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② 확장적 통화정책, ③ 제조업 활성화, ④ 수출확대와 자국 시장 보호, 성장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⑤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이다.

① **속도조절에 나선 재정건전화**: 주요국 신정부는 재정건전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건전화의 속도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재정긴축 속도를 완화하고, 일본은 재정긴축을 통한 건전화에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즉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 확대와 재원 조달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부가증세와 사회보장세율 인상,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프랑스는 부가증세, 금융거래세 신설 등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다.

② **확장적 통화정책**: 미국, 일본, 유로존은 내수경기 부양, 자국통화 약세, 재정위기 차단을 위해 무기한 또는 무제한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아베 내각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엔高 억제와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물가불안 및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선진국과 같은 공격적인 양적완화와 금리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③ **제조업 활성화**: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해 2016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본은 '제조업 강국'으로 강한 일본경제 부활을 주창하고 있다. 사회당 정부인 프랑스조차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은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이전을 유도하고, 기업 관련 세금부담 완화, 규제완화, 제조업혁신네트워크 구축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일본은 제조업 강국과 함께 무역강국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EU도 무역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집권 2기를 맞은 미국 오바마 정부는 기존 국가수출확대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밖으로 FTA 체결을 확산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자국산업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자국통화 약세 용인, 통상압력 강화 등 자국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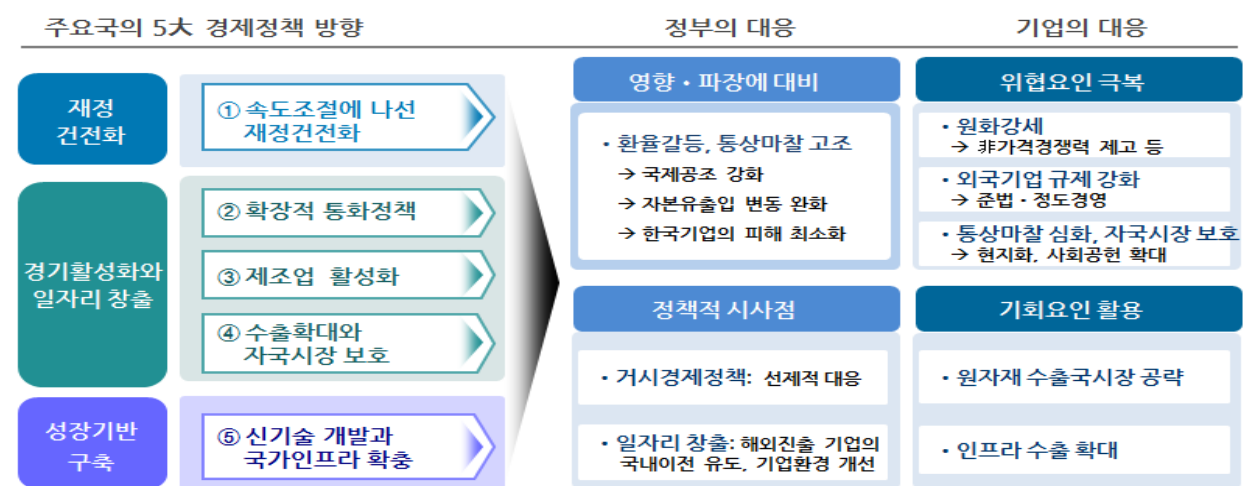
⑤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 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은 물론 전력, 의료, 교통 등에 IT기술을 접목한 IT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은 재난방지 인프라와 전력, 중국은 도시화 등의 국가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가인프라 투자를 단순히 자국 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프라 수출과도 연계시키고 있다.

###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

주요국 신정부가 자국경제 챙기기에 급급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글로벌 환율갈등이 첨예화되고, 자국의 시장·기업·기술보호 중시에 따른 통상마찰, 외국기업 규제도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반대, 선진국의 과도한 양적완화 자제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외환건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통상분쟁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내용 중 안정성장,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요국 신정부가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이전 유도,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 등과 같은 주요국 경제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은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원화강세, 외국기업 규제 강화, 주요국의 자국시장 보호 등 위협요인에 대해 非가격경쟁력 제고, 준법경영, 현지화·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반면, 높은 원자재 가격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 부상, 주요국의 국가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유치경쟁 등은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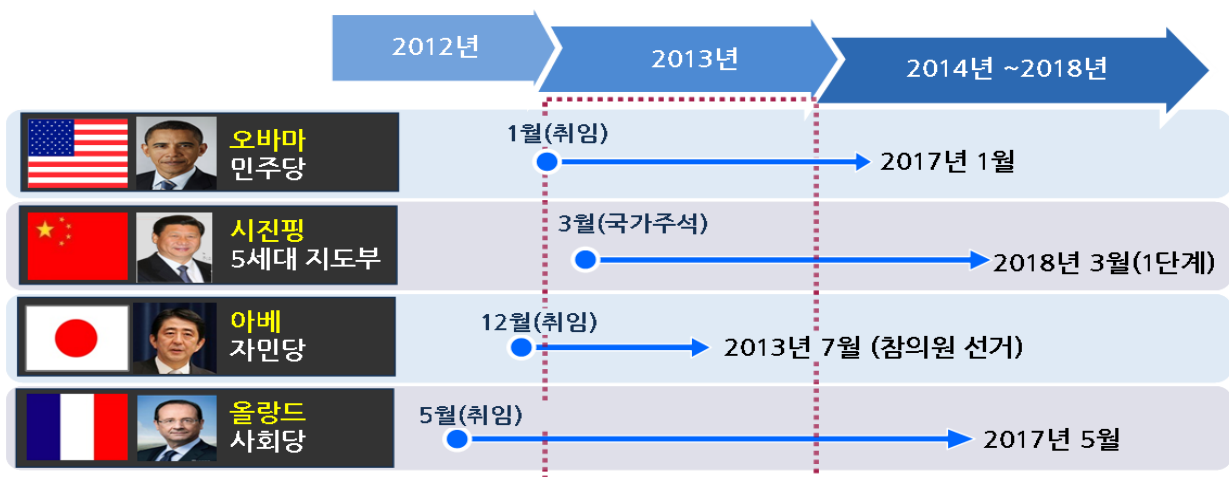
## I. 주요국 신정부의 출범

###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주요국 신정부

□ 2013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동시에 출범하는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이 본격화<sup>1)</sup>

- 미국은 2013년 1월 21일 오바마 집권 2기가,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의회)에서 국가지도부가 교체되면서 5세대 지도부가 정식 출범할 예정
  - 중국은 2012년 11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과 군을 대표하는 5세대 지도부(시진핑 총서기 등)를 선출
- 일본은 2012년 12월 26일 아베 내각, 프랑스는 5월 15일 올랑드 대통령 정부가 공식 출범
  - 일본은 민주당(진보정당) → 자민당(보수정당), 프랑스는 대중운동연합(보수정당) → 사회당(진보정당)으로 정권이 교체

주요국의 신정부 출범 현황



□ 주요국 신정부는 정치성향을 반영하면서도 각국이 처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sup>1)</sup> 이탈리아는 2013년 2월에, 독일은 9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들 국가도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예정

- 일본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강한 일본경제의 부활, 17년 만에 집권한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주창
  -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아베노믹스)
-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1기(2009~2012년)의 금융위기 해결에서 나아가 재정건전화, 중산층 확대에 방향을 설정
- 중국은 12·5계획(2011~2015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sup>2)</sup>'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
  - 新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2013년 10월에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구체화될 계획

#### 주요국의 新舊 정부 경제정책 방향 비교

	舊정부	新정부
	오바마 집권 1기	오바마 집권 2기
	금융위기 해결	재정건전화, 중산층 확대
	노다 민주당·국민신당 내각	아베 자민당·공명당 내각
	엔高 해소, 재정건전화	강한 일본경제 부활
	4세대 지도부	5세대 지도부
	과학적 발전관: 내수진작 및 균형발전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
	사르코지 정부	올랑드 정부
	구조조정을 통한 고강도 재정긴축	성장 중시와 양극화 해소

□ 주요국 경제정책의 큰 흐름은 ① 재정건전화, ②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③ 성장기반 구축 등 크게 3가지로 요약

- 미국, 프랑스(유로존), 일본 등은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sup>2)</sup> 투자 및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 주민소득 증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개선, 금리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 등 금융개혁, 대외개방 확대 등이 주요 내용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2012년): 美 107%, 佛 90%, 日 237%<sup>3)</sup>

- 저성장과 고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매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등 성장기반 구축 정책도 병행

####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흐름



□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하고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는 세계경제를 대표<sup>4)</sup>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

• 4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2%, 프랑스 대신 EU를 포함할 경우 58.9%(PPP, 2012년 기준)

• 한국 전체 수출 중 4개국의 비중은 41.9%이며, 프랑스 대신 EU를 포함할 경우 50.3%(2012년 기준)

- 세계를 대표하는 이들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도 시사점을 제공

<sup>3)</sup> IMF, WEO. (2012.10.)

<sup>4)</sup>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는 G7 또는 G2 구성원으로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



## Ⅱ. 주요국의 5大 경제정책 방향

□ 주요국 신정부의 3가지 큰 정책 흐름에서 5大 경제정책 방향을 도출

- 재정건전화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안정을 위해 ① 재정건전화의 속도를 조절
  - 日은 재정건전화 추진방향을 재정긴축형에서 성장-확대형으로 전환
-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화정책은 ② 확장적 통화정책, 산업정책은 ③ 제조업 활성화, 통상정책은 ④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정책을 추진
- 성장기반 구축의 경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⑤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 정책을 강화

□ 주요국 신정부는 전반적으로 자국경제 챙기기에 급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各自圖生)

### 5大 경제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내용

정책 흐름	5大 경제정책 방향	세부 정책 내용
재정건전화	① 속도조절에 나선 재정건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화 정책기조하에 경기회복정책 가미</li> <li>• 부자증세, 소비세율 인상 등 세입 확대</li> </ul>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② 확장적 통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확대</li> </ul>
	③ 제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이전 유도</li> <li>•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제조업 혁신 지원</li> </ul>
	④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체결, 자국통화 약세 유도</li> <li>• 자국산업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li> </ul>
성장기반 구축	⑤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IT융합기술 등</li> <li>• 전력, 도시화 등</li> </ul>

## 1. 속도조절에 나선 재정건전화

▶ 재정건전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회복 정책을 가미

- 美, 佛은 재정긴축 속도를 완화, 日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책대로 선회
- 주요국은 부자 증세, 부가세 및 소비세 인상 등 세입확대도 병행

□ 주요국 신정부들은 재정건전화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회복 정책을 가미하는 등 재정건전화의 추진 속도를 완화

- 美는 재정긴축 강도를 완화하고 佛과 日은 각각 산업경쟁력 강화,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형 재정건전화를 추진

□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긴축과 분배' 중심에서 '긴축과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다소 전환했고, 미국도 재정긴축 강도를 완화

- 세입 확대를 통한 '先분배'를 강조해온 올랑드 정부는 <갈루아<sup>5)</sup> 보고서>를 계기로 '先성장'을 통한 재정확보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

- 조세부담 경감과 투자활성화가 핵심 내용인 <갈루아 보고서>를 반영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2012년 11월 6일)

### 프랑스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기업 세금부담 경감	- 200억유로 경감(2013년 100억유로, 2014~2015년 100억유로) - R&D 투자세액 공제, 재정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 정부투자은행(BPI)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대출 보증 시행(5억유로) - 5개 우선분야의 중소기업에 투자(20억유로) 지원

- 미국은 강제 재정지출 감축<sup>6)</sup>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지출 축소방안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sup>5)</sup> 갈루아는 미테랑 행정부 시절 고위 관료로 재직하다가 시라크 행정부 시절에는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SD)의 CEO로 활동했으며, 올랑드 대통령 취임 후 국가경쟁력위원장에 임명

<sup>6)</sup>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에 각각 547억달러씩 매년 1,093억달러(총 1.2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조치로서, 시행을 2개월 연기



-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복지부문 지출 축소를 억제하는 한편, 2기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
- 재정절벽협상 합의에서 R&D 투자 등에 대한 감세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최고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8%로 인하할 방침

□ 일본 아베 내각은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

- '제한적 재정책대'를 주장한 민주당 정권과 달리 대규모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
- 내각부는 10.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13.1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sup>7)</sup>

□ 주요국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기업 관련 세금을 낮추지만, 부유층 증세, 소비세율 인상, 금융거래세 신설 등으로 재정건전화의 정책기조는 유지

- 2013년 초 美 재정절벽협상 합의의 핵심은 부유층 증세와 사회보장세율 인상으로, 2013년 세수가 약 2,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sup>8)</sup>
- 日 아베 내각은 이전 내각에서 결정한 소비세율 인상<sup>9)</sup>을 2013년 하반기에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예정
- 佛 정부는 연 100만유로 이상 소득계층에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대기업 법인세율도 인상(33.3% → 35%)<sup>10)</sup>
- 2012년 8월부터 프랑스는 세계 처음으로 시가총액 10억유로 이상인 프랑스 회사 주식을 매입할 경우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

<sup>7)</sup> 日 내각부 (2013.1.11.). Emergency Economic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Japanese Economy. Press Release.

<sup>8)</sup> 사회보장세율 인상으로 1,260억달러, 부유층 소득세율 인상으로 500억달러, 의료개혁으로 240억달러의 세수가 증가(Goldman Sachs (2013). US Daily: the Consumption Hit from Higher Taxes.)

<sup>9)</sup> 노다 내각에서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다시 10%로 인상할 계획

<sup>10)</sup> 2013년 프랑스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법인세율을 33.3%에서 각각 30.0%, 15.0%로 인하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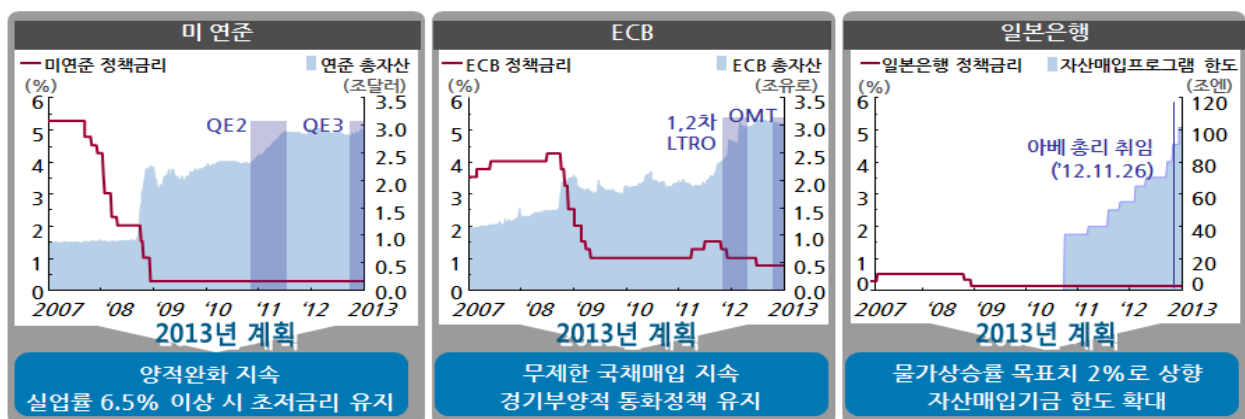
## 2. 확장적 통화정책

- ▶ 美, 유로존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日도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가세  
- 中은 공격적인 양적완화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

□ 미국, 일본, 유로존은 내수경기 부양, 재정위기 차단, 자국통화 약세를 위해 무기한 또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

- 2012년 12월 12일 미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2.5% 이하이고 실업률이 6.5% 이상일 경우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월 450억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자산매입 계획도 발표
- 유럽중앙은행은 2013년 첫 통화정책회의(1.10.)에서 경기회복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現 경기부양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
- 아베 총리는 엔高 억제와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일본은행에 물가상승률 목표치 2% 달성 시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주문<sup>11)</sup>

주요국의 통화정책 비교



자료: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Bloomberg

□ 중국은 선진국과 같은 공격적인 양적완화 및 금리인하에는 신중한 입장

-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2013년 1월 신년사에서 신중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sup>11)</sup> 아베 총리는 물가상승률 목표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은행법 개정까지 시사

· 인민은행은 2012년 6월과 7월 정책금리를 인하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인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정책을 중단한 상태<sup>12)</sup>

-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락을 원하지 않지만, 부동산 버블 및 물가 불안도 원하지 않기 때문<sup>13)</sup>

□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효과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논란 고조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추진을 일정 정도 제한

- 선진국 양적완화의 경기부양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환율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sup>14)</sup>

·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日 양적완화 정책이 국제금융 시장에 과잉유동성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2013.1.17.)

-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경기부양효과보다는 일본 내 자금의 해외이탈,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

#### 아베노믹스에 대한 상반된 시각

▷ 폴 크루그먼, 에드 로저스 로저스 투자자문사 사장 등이 아베노믹스를 옹호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의 대담한 재정지출과 대규모 재정완화정책이 필요한데, 재정파탄 위험을 강조하며 이론에만 얽매어는 다른 선진국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폴 크루그먼, 美 프린스턴大 교수)

▷ 후지마키 다케시, 후카오 미쓰히로 게이오大 교수 등은 아베노믹스가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재정건전성만 훼손한다고 비판

"일본 국가부채 규모를 고려했을 때 추가 재정지출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엔 약세를 예상한 일본 국민이 해외자산 매입을 위해 은행예금을 인출한다면 재정붕괴 우려가 가중될 것"(후지마키 다케시, 후지마키 재팬 회장)

<sup>12)</sup> 2012년 6월과 7월 각각 25bp, 31bp 인하한 후 현재 6.0%를 유지(은행 1년만기 여신금리 기준), 기준율은 2012년 2월과 5월 각각 50bp씩 인하한 이후 20.0%(대형금융기관 기준)로 동결된 상태

<sup>13)</sup> 중국 신규주택가격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2012년 7월 -2.42%에서 12월 0.03%로 상승 전환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1.8%에서 2.5%로 상승

<sup>14)</sup> 2013년 1월 IMF 총재는 "인위적인 통화가치 하락은 IMF 원칙에 반하는 것", 러시아 중앙은행 수석부총재도 "주요 세계경제권이 동시에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환율전쟁 문턱에 서있다"고 발언

### 3. 제조업 활성화

- ▶ 주요국은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부활과 활성화를 강조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이전을 유도하고, 제조업 혁신을 지원
  -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규제 완화 등 기업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

□ 주요국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

-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해 2016년까지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추진하고, 일본도 제조업 강국 달성을 통해 강한 일본경제를 주창
- 좌파 사회당 정부인 프랑스조차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sup>15)</sup>

#### 주요국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

부 문	주요국의 정책 내용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이전 유도	- 국내이전 비용 지원과 해외이전 혜택 축소(美) - 출구세 부과(佛)
기업환경 개선	- 법인세 인하(美, 日) - 규제철폐를 위한 국가첨단테스트 도입(日)
제조업 혁신 지원	- 기업주도 과학기술프로젝트 지원(中) -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 구축(美)

□ 해외진출 자국기업의 본국회귀를 장려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이전을 억제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 전력

- 美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회귀 기업에 대해 이전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감면하고, 해외이전 기업은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 프랑스 정부는 자국기업이 본사나 자회사를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 출구세(Exit Tax)를 5년에 걸쳐 부과하기로 결정

<sup>15)</sup> 2012년 10월 EU집행위는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6%에서 2020년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新산업정책을 제시

□ 기업의 세금부담 축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활동, 특히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

-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공약을 통해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특히 제조업은 25%까지 인하하겠다고 선언
- 일본 자민당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법인세<sup>16)</sup>의 대담한 인하를 공약
  - 자민당은 외국과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도적 장애를 3년 내에 철폐하기 위해 '국가첨단테스트' 도입을 추진

□ 기업 연구개발 지원, 제조업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활동을 지원

- 중국은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주도 과학기술프로젝트 지원<sup>17)</sup>'을 결정
- 미국은 제조업 혁신과 국내이전 확대를 위해 1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를 구축

####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을 통해 2016년까지 제조업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기 위해 5대 정책을 제시

- ① 법인세 감면, ② 해외이전 감세 폐지 및 국내이전 세제혜택,
- ③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개선, ④ 근로자 200만명 기술훈련,
- ⑤ 제조업 혁신연구기관 15~20개 설립

(자료: President Barack Obama (2012). A Plan for Jobs & Middle-class Security.)

<sup>16)</sup> 일본 법인세율은 2012년 4월 30%에서 25.5%로 인하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

<sup>17)</sup> 종래의 정부 주도 연구개발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

## 4.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 ▶ 내수경기 부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FTA 체결 등 수출시장 확대정책을 추진  
 - 자국산업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자국시장 보호정책도 병행

□ 주요국 신정부는 자국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확대정책을 더욱 강화

- 일본은 제조업 강국과 함께 무역강국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EU도 무역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제조업, 중소기업을 지원
- 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정부는 기존 국가수출확대정책(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
  - 2010~2014년간 수출 2배, 일자리 200만개 창출 목표

주요국의 수출확대 및 자국시장 보호 정책

구분	수출시장 확대	자국시장 보호
미국	- 다자: TPP 가시적 성과 - 양자: 美-EU FTA 추진	- 자동차, 에너지 산업 지원 - 지재권 보호, 대중국 통상공세 강화
중국	- 韓中 등 역내 FTA 주력	- 전략산업 국가지원
EU	- 주요 무역파트너와 FTA 체결(美, 日) - 중국은 투자보호협정(BIT) 추진	- 제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지재권 보호, 환경규제 강화 등
일본	- 농업 등 국내 이슈로 모호한 입장 ("성역 없이 관세를 철폐하는 TPP에 반대")	- 일본산업부흥계획: 부품소재 및 제조업 육성, 지재권, 표준화 선점 등

□ 주요국은 안정적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 체결 확산을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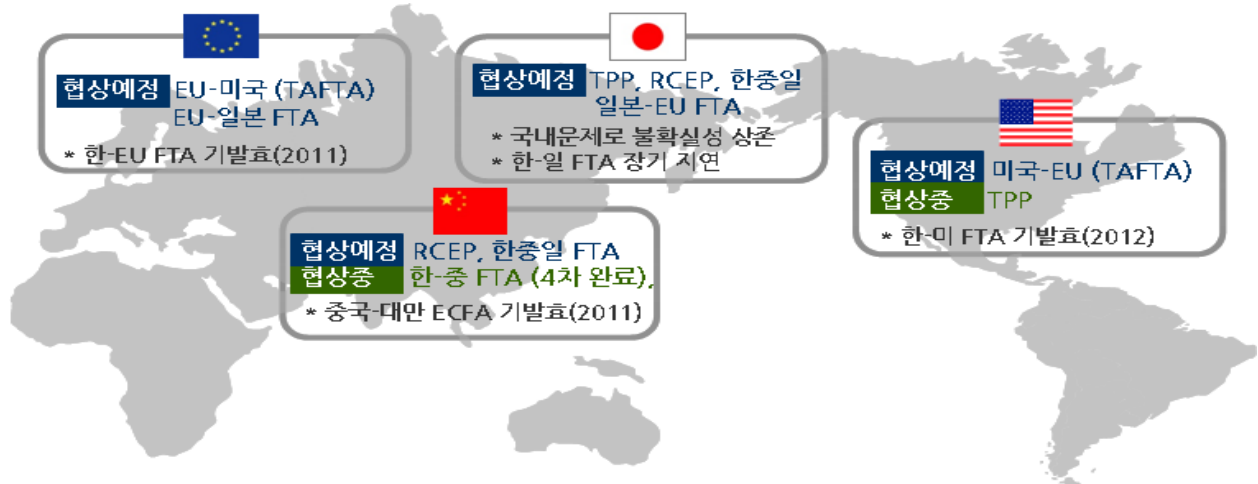
- 미국은 亞太지역을 겨냥한 다자간 FTA인 TPP 체결을 가속화하고, EU와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sup>18)</sup>)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
- EU는 미국, 일본과 FTA를 추진할 방침이고, 일본은 TPP나 EU와의 FTA에 긍정적이나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단에 유보적인 모습

<sup>18)</sup> Trans-Atlantic Free Trade Area는 1998년부터 미-EU 산업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간 미국의 소극적 자세로 지연되다가 금융위기 이후 체결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



-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경제에 타격인 큰 선진국과의 FTA보다 韓中 FTA, 韓中日 FTA, RCEP<sup>19)</sup> 등 역내 국가와의 FTA 체결에 주력

###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및 2013년 계획



- 주요국은 자국산업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자국통화 약세 용인, 통상압력 강화 등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정책을 추진

-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국산업 육성책 등과 같은 은밀한(murky) 보호주의 정책을 지속

- 美: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약속
- 中: 환경 및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을 지속
- 日: 환경, 인프라, 서비스 등 패키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주요 선진국은 양적완화로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하면서도 신흥국에 대해서는 통화가치 절상, 투자자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

- 美/EU: 對中 환율절상 요구 및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日: 엔高 저지를 위해 양적완화를 추진한다고 공식 표명
- 中: 선진국 공세에 대응하여 해외기업 M&A 확대 및 범국가적 특허전략 강화(2011년 특허출원 세계 1위 52만 6,000건<sup>20)</sup>)

<sup>19)</su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과 한, 중, 일, 인도, 호주 등 16개국이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sup>20)</sup>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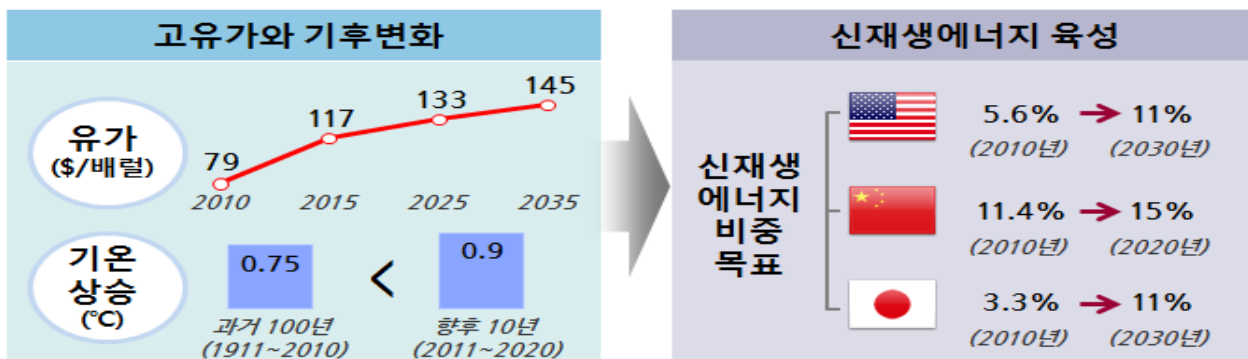
## 5.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

- ▶ 신재생에너지, IT융합 등 신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전력, 도시화 등 국가 인프라도 확충
  - 국가 인프라 투자를 인프라 수출로 연계하는 정책도 추진

□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

- 오바마 정부는 2기에서도 청정에너지<sup>21)</sup> 확대를 통해 석유 의존 탈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중점<sup>22)</sup>
  - 생산전력의 청정에너지 비중을 현재 40%에서 2035년 80%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를 100만대 보급할 계획
- 중국 5세대 지도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신에너지<sup>23)</sup>, 전기자동차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정책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목표



자료: IEA (2012). Renewables Information.

- 전력, 의료, 교통 등의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사회시스템 효율화를 추진
- 미국은 의료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오바마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등 의료정보 IT시스템을 구축

<sup>21)</sup> 미국정부의 '청정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셰일가스를 포함한 개념

<sup>22)</sup>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을 향후에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

<sup>23)</sup> 중국정부의 '신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한 개념

- 일본은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교통IT, 전자정부 등을 활성화하는 '사회 전체의 IT화'를 지향

□ 전력, 도시화 등 국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경제안정을 도모

- 일본 아베 내각은 국토안전을 위해 재난방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력난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조건부 원전 재가동 등을 추진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에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투자할 계획

#### 아베 내각의 안정적 전력확보 방안

- ▷ 아베 내각은 10년 안에 지속 가능한 전원(電源)구성의 최적 조합 확립을 제안
- 3년간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최대화, 조건부 원전도입과 신에너지 개발에 주력
  - 원전 재가동은 순차적으로 판단하고 3년 내에 원전에 대한 결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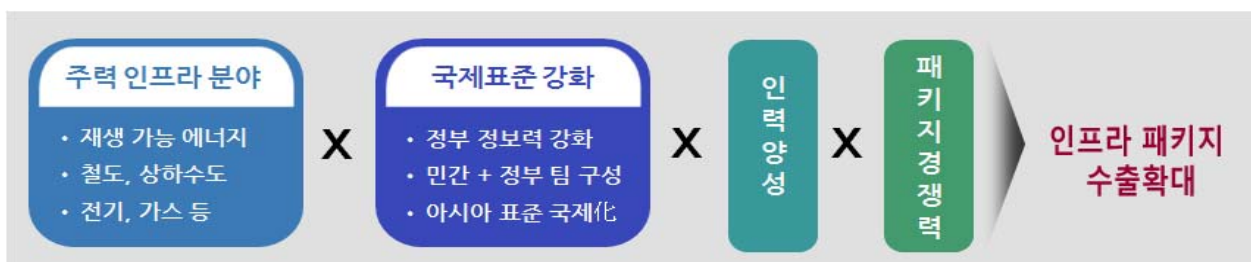
(자료: 자민당(2012). "정책공약집")

- 2013년 3월 중국 5세대 지도부는 도시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시화 촉진 발전계획(全國促進城镇化健康發展規劃)'을 발표할 예정
  - 2020년까지 40조위안을 투자해 도시화율을 2011년 51.3%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국가 인프라 투자를 인프라 수출로 연계하는 정책도 추진

- 일본은 인프라 패키지 수출에 역점을 두고 표준정립과 인재양성에 주력

#### 아베 내각의 인프라 패키지 수출 정책



자료: 자민당(2012).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

### Ⅲ. 시사점

자국경제에 보다 유리한 정책 추진(各自圖生)으로 글로벌 갈등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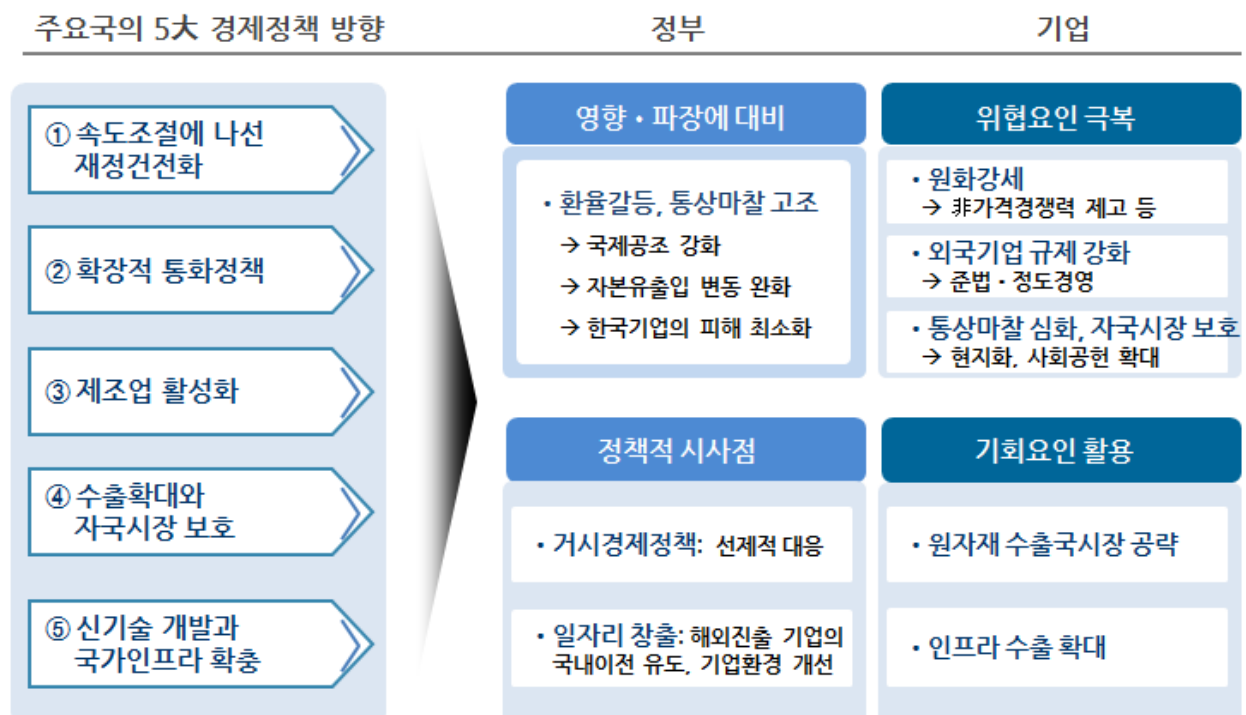
□ 주요국 신정부가 자국경제 챙기기에 급급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협력·공조보다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글로벌 환율갈등이 첨예화되고, 자국의 시장·기업·기술보호 중시에 따른 통상마찰과 외국기업 규제도 심화될 전망

□ 한국정부는 글로벌 갈등 고조에 대비하면서도, 주요국의 경제정책 내용 중 안정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한국 현실에 맞게 활용할 필요

- 기업은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

####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향




**정부: 글로벌 갈등 고조에 대비,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환율갈등 및 통상마찰 고조에 국제공조 강화,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등으로 대응
  - G20,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반대, 과도한 양적완화 자제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도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sup>24)</sup>
  - 과도한 외국인자금 유입으로 원화강세가 심화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 기존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확대하거나 국제적인 합의를 전제로 한시적인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도입
  - 보호주의 확산으로 한국기업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통상분쟁 전담조직을 강화
- 주요국 신정부가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저성장 장기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할 필요
  -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대전제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
  - 물가안정 기조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회복과 급격한 원화강세 방지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이전 유도 등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확대
  - 세제혜택, 금융지원, 국내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이전을 유도

<sup>24)</sup> 2010년 하반기 글로벌 환율갈등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중재로 국제사회의 합의점이 도출되고 환율갈등이 진정

- 현행 U턴 지원책은 비수도권 이전 중심, 소규모 지원예산(2013년 355억원), 설비도입 시 낮은 관세혜택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
- 기업환경 개선, 기업지원 강화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 美, 日은 기업 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佛 사회당 정부도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감면,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고용창출을 도모

### 기업: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활용

- 원화강세, 외국기업 규제 강화, 주요국의 자국시장 보호 등 위협요인에 대해 非가격경쟁력 제고, 준법경영, 현지화·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대응
  - 두드러진 원화 강세를 극복하기 위해 환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원가절감, 시장 다변화, 사업구조 고도화, 브랜드력 제고 등을 추진
  - 외국기업 규제 강화, 통상마찰, 자국시장 보호 움직임에 대해서는 준법·정도경영, 현지화, 사회공헌 확대로 대응
- 高원자재 가격, 주요국의 국가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유치경쟁 등은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기회요인으로 활용
  -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재 수출국가를 중점적으로 공략
  - 중국의 도시화 확대 등 주요국의 국가인프라 확충<sup>25)</sup>을 한국의 인프라 수출 기회로 활용
  - 주요국 신정부의 제조업 유치경쟁으로 신규투자가 확대될 IT, 자동차, 부품소재, 에너지·석유화학 산업도 한국기업에 기회요인 

<sup>25)</sup> 세계 인프라 시장은 2030년 41조달러로 성장할 전망(철도·도로 7.8조달러, 전력 9조달러 등)  
(經濟産業省 (2010). "インフラ関連産業の海外展開のための総合戦略".)



##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lt; 1일 지표 &gt;

		1. 15	1. 16	1. 17	1. 18	1. 21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056.50	1,058.70	1,058.10	1,057.20	1,062.90
	엔/달러(뉴욕시장)	89.460	88.835	88.610	90.065	90.160
	달러/유로(뉴욕시장)	1.33750	1.32980	1.32900	1.33760	1.33170
금리	회사채(3년AA-, %)	3.21	3.21	3.19	3.20	3.19
	국고채(3년, %)	2.73	2.74	2.73	2.75	2.74
	CD (91일, %)	2.85	2.85	2.85	2.85	2.85
	LIBOR (3개월, %)	0.30300	0.30300	0.30200	0.30200	0.30200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107.44	106.59	106.47	107.01	107.95
	WTI(S, \$/배럴)	93.35	94.24	95.42	95.48	..
	CRB 현물가격지수	486.20	485.79	485.77	487.44	..
주가지수(KOSPI, 증가)		1,983.74	1,977.45	1,974.27	1,987.85	1,986.86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68	70	68	67	66

## &lt; 월별 지표 &gt;

	2011년	2012년	2012.8월	2012.9월	2012.10월	2012.11월	2012.12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sup>1)</sup>	7.0	..	0.2	0.7	-0.8	2.9	..
평균가동률	79.9	..	73.7	75.2	75.9	77.4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3	..	0.8	2.6	0.8	2.0	..
실업률	3.4	3.2	3.0	2.9	2.8	2.8	2.9
실업자(만명)	85.5	82.0	76.4	75.2	71.8	71.0	73.7
총취업자 수(만명)	2,424.4	2,468.1	2,485.9	2,500.3	2,506.9	2,494.1	2,440.2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2	2.0	2.1	1.6	1.4
생산자물가 상승률 <sup>2)</sup>	6.1	0.7	-0.1	0.2	-0.5	-0.9	-1.2
생활물가 상승률	4.4	1.6	0.6	1.7	1.6	1.0	0.7
수출(억달러, FOB) <sup>3)</sup>	5,552.1	5,480.8	430.5	454.2	470.9	477.9	450.3
(증감률)	(19.0)	(-1.3)	(-6.0)	(-2.4)	(1.0)	(3.9)	(-5.7)
수입(억달러, CIF)	5,244.1	5,195.8	411.0	425.5	434.0	433.8	431.1
(증감률)	(23.3)	(-0.9)	(-9.4)	(-6.0)	(1.6)	(0.9)	(-5.2)
외환보유액(억달러)	3,064.0	3,269.7	3,168.8	3,220.1	3,234.6	3,260.9	3,269.7

1) 통계청 (2012. 12. 28.) “201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2012년 12월부터 생산자물가 기준년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2010=100)

3) 관세청 (2013. 1. 14.) “2012년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의거하여 작성

## &lt; 분기 지표 &gt;

	2010년	2011년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2012년 3분기
GDP 성장률 <sup>1)</sup>	6.3	3.6	3.6	3.3	2.8	2.3	1.6
민간소비	4.4	2.3	2.1	1.1	1.6	1.1	1.5
설비투자	25.7	3.7	1.2	-3.3	8.6	-3.5	-6.0
건설투자	-3.7	-5.0	-4.0	-2.1	1.5	-2.1	-0.1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51.8	45.4	47.5	45.4	44.2	46.6	43.6
SERI 경제행복도지수 <sup>2)</sup> (연간은 연말 기준)	0.658	..	0.693	..	..	..	..
개인금융자산(조원) <sup>3)</sup>	2,187.9	2,303.4	2,234.4	2,303.4	2,365.3	2,384.8	2,449.9
개인금융부채(조원)	1,016.6	1,103.5	1,074.0	1,103.5	1,106.9	1,121.4	1,135.4
채정수지(조원)	16.7	18.6	16.8	18.6	-11.3	-11.5	-3.7
경상수지(억달러) <sup>4)</sup>	293.9	265.1	69.0	115.1	25.6	111.9	147.1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sup>5)</sup>	3,594	3,984	3,948.4	3,987.2	4,116.6	4,157.7	4,193.8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2010년 4/4분기부터 소득분배 부문 하위지수 산정법 개정으로 과거 자료와 상이

3)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4)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5) 기준

5)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lt; 주요국 통계 &gt;

(전년동기 대비, %)

		2011년	2012년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2012년 3분기	2012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sup>1)</sup>	1.8	..	4.1	2.0	1.5	2.0	..
	실업률 <sup>2)</sup>	8.9	8.1	8.5	8.2	8.2	7.8	7.8
	소비자물가 <sup>2)</sup>	3.2	..	3.0	2.7	1.7	2.0	..
일본	GDP 성장률 <sup>1)</sup>	-0.6	..	-1.2	5.2	0.3	-3.5	..
	실업률 <sup>2)</sup>	4.6	..	4.5	4.5	4.3	4.2	..
	소비자물가 <sup>2)</sup>	-0.3	..	-0.2	0.5	-0.2	-0.3	..
유로 지역	GDP 성장률 <sup>1)</sup>	1.4	..	-0.3	0.0	-0.2	-0.1	..
	실업률 <sup>2)</sup>	10.2	..	10.7	11.0	11.4	11.6	..
	소비자물가 <sup>2)</sup>	2.7	..	2.7	2.7	2.4	2.6	..
중국	GDP 성장률 <sup>1)</sup>	9.3	..	8.9	8.1	7.6	7.4	..
	실업률 <sup>2)</sup>	4.1	..	4.1	4.1	4.1	4.1	..
	소비자물가 <sup>2)</sup>	5.4	2.6	4.1	3.6	2.2	1.9	2.5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